

국방부 '기부대양여' 방식 개선 없인 반발 계속된다

고흥만 간척지 후보지 부상...새 국면 맞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해남 이어 고흥도 강력 반대
'기부대양여' 광주·전남 모두 실패
국책사업 우선 배정 등 혜택 늘려
이전 대상지역 수용 여건 조성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고흥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군공항 이전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방부는 최종 예비 이전 후보지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송귀근 고흥군수 및 군민 상당수가 이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고흥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 자체가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안, 해남 등에서 이미 '퇴짜'를 맞은 국방부 '기부대양여' 방식이 근본적으로 혁신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흥만 간척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부상·고흥군, "고흥 미래 담을 곳" 반발=국방부가 새로운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간척지가 펼쳐진 '고흥만' 일대로 알려졌다. 이곳은 항공센터와 경비행장이 있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국가중합비행성능 시험장이 조성 중이다. 국방부는 공군과 협의해 장애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흥을 이전 후보군에 추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 "고흥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종 예비 이전 후보지에 포함될 것도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고흥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스마트팜, 리조트 등 고흥의 미래를 담을 공간"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반대하는 군공항을 고흥이 왜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 의견 수렴도, 최소한 군을 대표하는 단체장에게도 한 마디 사전 논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막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는 고흥에서도 무안이나 해남과 같은 반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가 이전 지역이 군공항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먼저 조성하고, 지역을 설득해 지역 간공항 유치 경쟁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도 그동안 다방면으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전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시·군이 이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을텐데 같은 안으로 계속 밀어붙이니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부대양여 방식 근본적인 개선 시급, 군공항 부지 난개발에 이전지역도 만족 못해=전남도는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 중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을 위해 투입하는 방식은 난개발을 전제로 한 후진적인 제도인데다, 이전 대상 지역 및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이전 대상 주민 보상비 '4500억원+알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광주시는 현재 군공항 부지 820만㎡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지어 5조7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조7600억원 가운데 신 군공항 조성에 4조1000억원을 쓰고, 중전 부지(군공항 이전 후 공유지) 정비에 8300억원, 금융비용 3800억원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은 돈은 4500억원에 불과하며, 이를 이전 대상 지역에 풀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10만50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조성해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다. 광주 역시 아파트 과다 공급, 난개발, 구도심 쇠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와 전남, 양측에게



"이번 추석 명절은 집에서 보내세요" 15일 광주 도심 곳곳에 추석 기간 동안 벌초나 성묘 등을 위한 이동을 자제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실패'를 안길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도 이전 지역에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지역정권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입장은 좀처럼 변화가 없다는 점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따라서 광주 시와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전 부지 정비 비용(8300억원)을 국방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전 대상지에 대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국책사업 우선 배정 등 정부 정책을 집중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국방부의 태도 변화가 광주 군공항 문제를 푸는 열쇠"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대상지 주민들이 군공항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취지 공감하지만 논의 절차 없어 뜬금없다"

광주시·전남도 통합 제안 정치권 반응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에 맞지 않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행발전과 지역 상생 등을 위해 행정통합은 반길만 하지만 시도와 정치권, 지역사회 등의 협의 없이 발표돼 "뜬금없다"는 지적도 많았고, 시도 통합이 지역 상생을 위한 '묘수'로 논의돼야 하며 '정치적 선택'으로 전락하면 안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5일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 확대, 지방의 소멸 위기, 광주와 전남의 갈등·경쟁 요인 부상 등의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안이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빈(광산갑) 의원은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지역 한계를 뛰어넘는 발전 전략을 요청받고 있다. 행정구역의 경직성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와 과제들이 통합을 통해 풀릴 수 있는 계기를 하나로 그려야 한다"며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안이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갑석(서구갑)·조오섭(북구갑) 의원은 "논의 절차가 생략된 성급한 제안"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전남 이형석(북구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먼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리에 맞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도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광주 시의회의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점은 매우 아쉽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이런 방식으로 던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의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과거 2차례나 시도통합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사례가 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했던 결과다. 광주시는 이런 교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라도 광주시는 시의회의 물론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의에서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던진 '시도 행정 통합' 제안에 대해 대체로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이 지난 주 나온 만큼 의원들 의견 수렴은 하되, 별도 입장 발표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코로나 19와중에 이 시장이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의원들 의견 수렴은 하고 있으나 당분간 별도 입장 발표는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이 시장 제안에 대해 의원들은 대체로 의아하다는 반응"이라며 "광주시의회의와 사전 공감이나 시장 조직 내부에서조차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제안이 왜 나왔는지 배경이 궁금하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日 새 총리 스가와 촌촌한 관계망...한일 관계 개선 역할 기대

일왕 즉위식때 비공식 면담

측근들과도 남다른 친분·소통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일본 차기 총리로 확정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광범장관은 물론 주변 인물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 개선에 역할이 주목된다.

도쿄 특파원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대표적 지일파로 꼽히는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시절, 정부 대표로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 비공식적으로 스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에는 면담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접어들고 있었다.

특히, 이 대표는 스가 장관 주변 인물들과도 남다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을 매개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우선 스가 장관이 '포스트 아베'가 되도록 힘을 실어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집권 자민당 간사장

이 이 대표와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원장 간사장은 이 대표와 인제대지 통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또, 스가 장관의 고향 친구인 사토 야스히로(佐藤康博) 미즈호금융그룹 회장, 스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모두 이 대표와 한일 현안 등에 대해 편하게 논의하는 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스가 장관 주변에 친한파가 많기 때문에 이 대표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이 대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